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남북미중 관계의 4가지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국의국어대 연구교수)

- I.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 II. 한미동맹은 미중관계보다 우선한다?
- III. 북미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 IV.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간섭은 굴욕이다?

1월 19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슈퍼파워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의 상호관계는 국제정치의 핵심 키워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한반도 문제였던 만큼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문제를 좌우하는 상황은 감정적으로 썩 내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가 결국 '강대국간 놀음'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 미중관계를 정확히 읽고 이에 기초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류적 시각'에 의해 가려진 남북미중 관계의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

### I.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그들은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부합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간 충돌은 결국 불가피하다고.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 협조체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말하지 않는다.

미중간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무정부적 국제정치에서 강대국들은 생존하기 위해 결국 패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논리에 기반한다. 부상하는 중국이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누구보다 힘이 세지는 것이며 따라서 현 패권국인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강대국이 패권을 추구할 가용 자산이 무한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대국의 흥망'에서 케네디(Paul Kennedy)가 논증하듯, 패권국가의 쇠퇴는 보통 과잉팽창으로 인한 재정위기로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합리적 강대국이라면 자살행위인 패권추구보다는 다른 강대국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즉, 독점할 수 없다면 담합이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현재 미중관계는 상호 패권추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협조체제를 통한 공생관계로 가고 있는가? 경험적 사실은 미중관계가 후자의 경로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5년 줄릭(Robert Zoellick) 미 국무부 차관이 미중 양국을 국제정치의 중요한 '이익상관자'라고 규정내린 것은 이를 단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는 "미중 양국은 상대방의 성공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사실 미중간 협조체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재정위기와 베트남 패착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이미 70년대 초 중국을 동아시아의 지역 파트너로 끌어 들였다.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리던 중국으로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최선의 생존전략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미중관계는 90년대 중반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1998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2001년 9.11사건을 기점으로 반테러리즘 및 핵확산 문제 등에 있어서 보다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더군다나 미중간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국관계를 보다 협력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국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고 반대로 금융위기에 허덕이는 미국에게 중국의 과잉자본은 한줄기 샘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 퍼거슨(Niall Ferguson)이 지적하듯, 미국과 중국은 이제 하나의 '차이메리카' 제국이 된 것이다.

물론 이렇다고 미중 양국이 완전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타이완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지정학적 대중국 포위전략은 미중관계를 때로 경색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폴레옹 전쟁 후 유럽협조체제나 20세기 후반 미소 알타체제에서 보여지듯 강대국간 협조체제속에는 이익균형 이외에 언제나 치열한 세력균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 담합관계에 있는 상대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멸을 의미하는 대규모 군사충돌은 또 언제나 회피되어 왔다. 더군다나 미중 양국은 가공할 핵무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21세기 미중관계가 20세기 초 대결적 영

-독관계보다는 협력적 영미관계 혹은 미소 알타체제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이유다.

## II. 한미동맹은 미중관계보다 우선한다?

그들은 말한다. 미국에게 한국은 중국보다 중요하다고. 따라서 한미관계의 긴장을 감수하면서까지 안정적 미중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을거라고.

그러나 한미동맹이 미중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은 상술한 미중간 협조체제를 무시하는 철저한 한국 중심적 시각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이 확연히 달라 보인다. 미중관계가 안정적인 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이라는 기존의 전략적 자산을 포기할 합리적 이유 역시 없다.

문제는 미중 협조체제가 한국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다. 예를 들어, 한국이 대북 강경책을 구사함으로써 한반도 분쟁가능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남북한과 동맹 관계로 얽혀있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다툼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1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경우와 유사하다.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통제해서라도 미중 협조체제의 훼손을 막으려는 합리적 동인을 갖는다. 미국이 연평도 사건 당시 남한의 공중폭격을 승인하지 않았거나, 연평도 사격훈련 직전 주한 미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 그리고 사격 훈련 당시 미군 참관인들이 일종의 인계철선 역할을 했던 사실은 모두 이러한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다.

물론, 미국이 안정적인 대중관계를 위해 남한의 자제를 요구할 것이란 논리는 북중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이 중국의 국가안보에 보다 사활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상대하며 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강대국들이 한반도 분쟁에 연루돼 상호간 충돌가능성이 대두되는 경우 한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상황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진통일과 핵개발을 시도했던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라든지, 1882년 청이 임오군란의 배후로 지목된 대원군을 납치하고 1885년 일본과 천진조약을 통해 조선에서의 상호충돌 방지에 타협했던 사실, 더 올라가 임진왜란시기 조선의 입장을 무시한 채 명과 일본이 강화

를 추진했던 사실 등은 모두 그러한 예이다.

이렇다면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궁극적으로 미중 협조체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북강경책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인 것이다. 강대국-약소국간 비대칭적 동맹관계는 일종의 '보호자게임'이다. 동맹 약소국(피보호자)은 동맹 강대국(보호자)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강대국의 바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이 미중관계에 우선할 수 없는 이유다.

### Ⅲ. 북미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그들은 말한다. 북한은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북미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이중적 대북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2005년 9월 타결된 9.19 공동성명에 대한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9.19 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의 핵포기(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표중 무엇이 우선하는가는 판단내리기 힘들다.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북미관계 정상화는 힘들고 반대로 북미관계 정상화 없이는 북한 역시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

따라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실패하는 이유를 단순히 북한의 불성실한 비핵화 의지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한쪽 면만을 보는 것이다. 북한의 의지 부족 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밀관된 대북정책 역시 관계 정상화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요인인 것이다.

북미간 관계 정상화 문제는 1994년 10월 양국 간 제네바 합의에 명시된 이후 핵심 현안이 되었다. 실제로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으로 북미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점쳐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임 부시행정부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고하는 상황에서 9.11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은 줄지에 '악의 축'이 되어버렸다. 이에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라는 벼랑끝 전술로 응수하였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5년 9.19공동성명이 타결되었지만,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관계 정상화는 또다시 중대한 난관에 직면하고 말았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북한의 불법금융활동을 문제 삼아 BDA은행의 북한자금을 동결해버리는 이중적 대북정책을 보였던 것이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역시 미국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상황과 맞물려 있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북한 핵폐기를 위한 북미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은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등 과시적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정치가 대선정국과 금융위기로 혼란해지면서 갖 취임한 오바마 정부에게 북한문제의 중요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긴장 고조를 통한 교착상태 타파라는 벼랑끝 전술에 또다시 의존했던 것이다.

이렇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는 향후 북한의 보다 성실한 핵포기 의지와 미국의 보다 일관적인 대북정책이 맞물렸을 때 급진전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때마다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증가하고, 더욱이 중국의 대북 딜레마가 극대화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그렇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그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미중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 IV.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간섭은 굴욕이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러나 현재 한반도 분쟁을 막는 안전핀은 남북한 정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라는 사실에는 침묵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연평도 사건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중국이 보인 적극적 태도에 감사의 뜻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은 연평도 사건 직후 다이빙귀 국무위원을 각각 남북한에 급파해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 중재를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 역시 확전 방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였다.

물론 미중 양국의 행태는 안정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려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전략의 소산이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남북 간 확전을 방지했다는 사실 자체는 당연히 평가받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억제노력이 없었다면, 연평도 교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후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의 간섭은 굴욕이기 보다는 오히려 고마워해야할 상황이었던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좌우 이데올로기를 떠나 언제나 국가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 논리에 닿아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치권력인가 아니면 일반 민중인가?

불행히도 한반도 역사에서 국가중심주의는 무수히 남용되어 왔다. 우리는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위대하다고 배우면서 당시 무신정권의 폭압정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일제의 잔혹한 식민정치에 대해 배우면서 그에 필적하는 조선 후기 극심한 가렴주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1945년 한반도 신탁통치가 강대국의 반민족적 간섭이라고 분개하면서 신탁통치가 최소한 한국전쟁은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연평도 사건으로 국가안보가 훼손됐다는 사실에 분개하면서도 정작 연평도에서 피란한 수천 명 민간인들의 '인간안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국가안보는 인간안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반대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안보 따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국가를 위해 언제나 희생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미 성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무슨 이유로 우리들을 속여 성안으로 불러 들여다가 우리들만 왜적의 손에 어육을 만들게 한단 말인가?"

'징비록'의 한 장면이다. 피란 가는 선조일행을 가로막고 울부짖는 백성의 절규가 옛날애기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다. 반복되지 말아야 할 슬픈 역사다.

(2011/01/24)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http://www.knsi.org))와 전화(02-733-3348)로 회원등록 및 후원이 가능하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